

<div data-bbox="204 356 569 44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74 465 501 510" data-label="Text"> <p>2012. 3. 5.</p> </div>	<div data-bbox="646 248 767 3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32 248 1287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최승원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2. 3. 5.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에 관하여 심의

①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에 관한 논의 결과

○ 양형 기준 설정 및 공개 시기

- 양형위원회는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 8월경까지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하게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기본 방향

- 선거범죄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무효와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 ☞ ①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가족등의 금품 기부행위, ③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방향 설정
- 구체적 양형기준 설정 방법은 전문위원단의 연구·검토에 맡기기로 결정

○ 개별 선거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설정 방향

-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도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서도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인터넷과 SNS 등의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점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여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하여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합의

② 새로 의결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범죄 유형 분류

-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침해행위,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 유출 또는 침해행위유형 등 영업비밀침해행위,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의 부정경쟁행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 설정

○ 주요 특징

-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소위 '산업스파이 사건'),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 차원

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엄정한 처벌 기함
-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기준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 침해	- 10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국외 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③ 향후 일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 관련

- 2012. 3. ~ 2012. 4. : 과거 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 2012. 3. ~ 2012. 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 2012. 7. ~ 2012. 8. :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희 거쳐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 2012. 3. 6. ~ 4. 6.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희
- 2012. 3. 26. :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2. 5. 7.(월) 16:00 개최 예정

⇒ 중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에 관한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설정 및 공개 시기

○ 양형 기준 설정 및 공개 시기

- 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8개 범죄군 중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인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
- 하반기에 양형기준을 설정할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 중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 8월경까지는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하게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2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기본 방향

-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효력이 있음
- 기존의 다른 범죄들과 달리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
- 다만,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방법은 전문위원단의 연구·검토에 맡기기로 결정

3 개별 선거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설정 방향

○ 주요 선거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유형	공직선거법	구성요건	법정형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230①1호	유권자,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	5년↓, 1,000만원↓
	§230①2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금품제공	
	§230①3호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제공	
	§230①4호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230①5호	금품을 받은 상대방	
	§230②, ①	정당, 후보자, 그 관계인들의 금품제공	7년↓, 1,500만원↓
	§230⑥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5년↓, 1,000만원↓
	§230⑦2호	당내경선 금품제공	3년↓, 600만원↓
	§231①1호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행위	7년↓, 300 ~ 2,000만원
	§231①2호	제1호의 대가로 금품제공	
	§231①3호	금품을 받은 상대방	
	§232①	후보 사퇴 대가 금품제공 또는 금품수수	7년↓, 500 ~ 3,000만원
	§233①	당선 사퇴 대가 금품제공 또는 금품수수	1년 ~ 10년
	§234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범행	1년 ~ 10년
기부행위 유형	§257 ①1호	§113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5년↓, 1,000만원↓
		§113②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요구행위	
		§114①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115 제3자의 기부행위	
	§257③	기부를 받은 상대방	3년↓, 500만원↓
허위사실 공표 유형	§250①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 공표	5년↓, 3,000만원↓
	§250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7년↓, 500 ~ 3,000만원
	§250③	당내경선 과정에서 §250① 위반	3년↓, 600만원↓
		당내경선 과정에서 §250② 위반	5년↓, 1,000만원↓

부정선거 운동 유형	§255①2호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선거사무장 등 활동	3년↓, 600만원↓
	§255①5호	금지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255①6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55①9호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55①17호	호별방문	
	§255①19호	전기통신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위반	
	§255②4호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년↓, 400만원↓
	§255②5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등	
	§255③2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5년↓
	§255④	선거운동정보 표시방법 위반 문자메시지	1년↓, 100만원↓
사전선거 운동유형	§254①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3년↓, 600만원↓
	§254②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2년↓, 400만원↓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도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허위사실공표 유형

- 최근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매체들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무차별적인 폭로, 비방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 유형의 경우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인터넷과 SNS 등의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점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

○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유형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여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하여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합의

II.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1 유형별 형량기준

가. 권리침해행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권리침해행위	- 10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다. 부정경쟁행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10월	6월 - 1년6월	1년 - 2년

② 주요 특징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최근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한 소리바다 사건,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특히 중국) 등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사건,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 등을 계기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다만, 실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처벌사례는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III. 향후 일정

① 선거범죄 양형기준 관련

- 2012. 3. ~ 2012. 4. : 과거 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 2012. 3. ~ 2012. 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 2012. 7. ~ 2012. 8. :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거쳐 양형기준 최종 의결

2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관련

- 2012. 3. 6. ~ 4. 6.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012. 3. 26. :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2. 5. 7.(월) 16:00 개최 예정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